

‘행정통합’ 속도전에 통합교육감·교원 인사 ‘뇌관’

통합교육감 선거 시기·교육자치권 놓고 교육계 이견 이해관계 복잡·교원단체 찬반 속 속의 과정 요구도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교육통합 추진 여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합교육감 선출 시기와 방식, 교원 인사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면서 교육통합이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

13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최근 행정통합 추진과 연계해 교육통합 논의에 착수했다. 양 교육청은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단일 통합교육감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선출 시기와 권한 구조 등 세부 논의를 시작했다.

가장 큰 쟁점은 통합 교육감 선출 시점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할지, 행정통합 이후 차기 선거로 미루기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통합 단체장과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선출할지, 아니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6월 선거 선출 방안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러닝메이트제 도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자치권 논란과 직결된다. 교육계에서는 교육통합 과정에서 교육청이 광역 행정조직에 흡수될 경

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자치 보장 조항을 명시하고,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육청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통합의 또 다른 쟁점은 교원 인사와 근무지 배치 문제다.

통합 교육청 출범 시 광주 지역 교직원들이 전남 도서·벽지 지역으로 발령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교원 사회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기존 근무지와 경력 보장, 교원이 불안하지 않은 광역 인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거 광주·전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원 인사 문제가 불거지며 통합 추진이 중단된 전례가 있는 만큼, 교육계 일각에

서는 교육통합을 행정통합과 분리해 선거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 역시 무거운 변수다. 통합을 통해 교육 자원과 정책을 공동 운영하면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정책 운영이 광주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전남 지역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처럼 교육통합을 둘러싼 쟁점이 6월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정치권과 행정통합 추진기구가 마련 중인 특별법에 교육계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가 향후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충분한 공론화와 속의 없이 속도전에 나설 경우, 교육통합 논의가 행정통합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오른쪽)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최근 간담회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가치를 완성하기 위한 교육계의 의지를 담은 공동 발표문에 서명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

■ 광주·전남 행정통합… 치안체계 변화는?

‘광역 치안 컨트롤타워’에 지역별 권역치안 유지 병행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교육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경찰 치안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재편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구역이 하나로 묶이면 행정·교육은 물론 치안 체계 역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행정통합 논의는 결국 치안통합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우세하다. 다만 현행 국가경찰 중심 구조에서 광주·전남 통합에 걸맞은 독립적·차별화된 치안 체계가 가능할지를 두고는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1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미 행정

시나리오는 ‘광역 단위 치안 총괄 체계 강화’와 ‘지역별 권역 치안 유지’의 병행이다. 현재의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을 통합하거나 기능을 조정해 하나의 광역 치안 컨트롤타워를 두되, 생활권별 경찰서와 지구대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제주형 자치경찰 모델의 확대 적용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광주·전남이 하나의 행정체계로 묶일 경우, 대도시와 농어촌·도서지역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교통·생활안전 분야를 자치경찰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관광·생활치

생활권별 경찰서·지구대 유지 거론

교통·생활안전 자치경찰 권한 확대

농어촌·도서지역 맞춤형 치안 악화

구역 통합에 따라 치안 체계가 조정된 사례들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제주특별자치도다. 제주는 2006년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이 통합되며 특별자치도로 출범했고, 이후 교통과 생활안전 일부 기능을 자치경찰제로 전환했다.

현재 제주에서는 신호위반·속도위반 단속, 음주운전 단속, 교통사고 처리 등 일상적인 교통 업무를 자치경찰이 전담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관광치안 역시 자치경찰의 주요 임무다. 반면 강력범죄 수사, 형사사건, 집회·시위 관리, 정보·보안 업무는 제주경찰청이 맡는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역할을 분담하는 이원화 구조가 운영되고 있다.

행정통합이 이뤄졌지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1998년 통합된 전남 여주시(여주시·여천시·여천군)와 2010년 출범한 경남 창원특례시(창원·마산·진해), 2014년 통합된 충북 청주시(청주시·청원군) 등은 기존 경찰서를 권역별로 유지하면서 행정구역 변화에 맞춰 관할과 인력을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통합 이후에도 옛 생활권 단위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지구대·파출소를 세분화하거나 기능을 보완하는 방식이 병행됐다.

이 같은 사례를 종합하면, 광주·전남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유력한

안 대안은 강화될 수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주민 밀착형 자치경찰제 안착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의 기조에 따라, 향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이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자치경찰위원회는 지구대장·파출소장 보직 적합성 심사 의견을 제시하고, 경찰 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우려도 적지 않다. 조직 통합으로 인력 운용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광주 도심과 전남 산어촌·도서지역의 치안 수요가 크게 다른 만큼 지역 맞춤형 치안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농촌 고령화 지역과 섬 지역의 치안 공백 문제는 통합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통합이 곧바로 치안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조직 개편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행정·교육 통합 논의와 함께 치안 분야에 대한 선제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병곤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통합이 추진된다면 치안은 단순한 조직 통합이 아니라, 지역별 안전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나만의 ‘MBTI 취향독서’ 13일 광주 서구 중앙동 서빛마루도서관 책마루를 찾은 시민들이 MBTI 성격유형 검사와 독서를 접목한 ‘MBTI 취향독서’ 코너에서 책을 고르고 있다. 도서관 이용자에게 특별한 독서 경험을 선사하는 ‘MBTI 취향독서’ 코너는 MBTI 16개 성격유형을 키워드로 나눠 독서를 추천하는 북 큐레이션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책에 대한 접근과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처자식 살해한 40대 가장 ‘무기→징역 30년’ 감형

법원 “반사회적 동기 범행 아냐…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고등학생 아들 두 명과 아내를 바다에 빠트리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살인,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선고된 A씨(49)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1시12분 진도군 진도항 선착장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바다로 돌진시켜 동갑인 아내 B씨와 고등학생 자녀 C군(17), D군(19)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주면 A씨는 혼자 차에서 빠져나왔다. 이후 진도항에서 1~2km 떨어진 야산에서 밤새 머물다가 2일 오후 공중전화로 지인에게 자신을 데려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지인의 차를 타고 2일 오후 6시께 광주로 도주했지만 범행 44시간 만에 서구 양동시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건설현장 일용직 철근 배근자로, 2억원 상당의 빚 때문에 급전직 어려움을 겪자 가족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불받지 못한 공사대금 때문에

인부들에게 3000만원 상당 임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노동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남은 가족들이 집이 될 것으로 생각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봤지만, 증거관계를 볼 때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을 일방적인 제의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사회적인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결국 자기 손으로 가족을 살해하고 본인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남은 평생 죄책감과 깊은 후회 속에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은 책임에 비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삼일건설(주) 법정관리 신청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여파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광주·전남 지역 중견 건설사인 삼일건설(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일건설(주)은 지난 6일 광주지방법원 1-1파산부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이어 12일에는 회생절차 진행 중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을 중단하기 위한 포괄적 급지명령 신청서도 제출했다.

현재 삼일건설의 채권자는 건설공제조합을 포함한 모두 63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삼일건설이 법원에 제출한 자산은 250억원이며, 부채는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일건설은 1995년 6월 20일 설립된 종합건설사로,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전국 111위, 전남 지역 9위에 오르며 지역 중견 건설사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최근 주택·건설 경기 위축과 자금 경색이 겹치면서 경영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일건설은 계열사인 파라뷰골프클래스(주)에 대해서도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했다.

광주지법은 오는 26일 법관 제205호 법정에서 삼일건설(주)과 파라뷰골프클래스(주)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향후 경영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국회의원 공천 등 미끼로 거액 횡령…징역 2년 선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공천 등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박삼용 전 광주 광산구의회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이 선고된 박 전 광산구의회(72)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은 2023년 3월께 피해자 A씨에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당직자 알선을 약속하고 특별당비 3억원을 받아 갹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에게 미군 부대 방역물품 납품 사업을 내세워 ‘이미 받은 특별당비 3억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더 돈을 더 대면 투자금·수익 20억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9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박 전 의원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받은 12억여원을 자신과 가족의 민형사 합의금 지급, 채무 변제 등에 썼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당비 납부로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는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여러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 회복을 약속하며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